

구조·구급관련 법령집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9구조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인천소방학교
Incheon Fire Academy

119구조에 관한 법률

7-54P

법률-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5-207P

법률-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

119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119구조에 관한 법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298 호, 2017. 12. 26., 일부개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8216 호, 2017. 7. 26., 타법개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 2 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 1 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 2 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 구조·구급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 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 정 2016. 1. 27.〉 1. "구조"란 화재, 재 난·재해 및 테러,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 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	제 20 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 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	

<p>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2. "119 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p> <p>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p> <p>4. "119 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p> <p>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p> <p>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p> <p>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p>	<p>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p> <p>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p> <p>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p> <p>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1. 단순 치통환자</p> <p>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p>	
--	--	--

<p>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2 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p>	<p>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p> <p>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p> <p>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p> <p>③ 구조·구급대원은 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p> <p>④ 구조·구급대원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적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p>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 3 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 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 1 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 4 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		

<p>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누구든지 119 구조대원·119 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 구조대·119 구급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구조·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 2 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p>제 6 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p> <p>① 소방청장은 제 3 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p>제 2 조(구조·구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중앙 구조·구급 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 월 31 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④ 소방청장은 제 3 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p>	

<p>7.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④ 소방청장은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4. 11. 19., 2017. 7. 26.></p> <p>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p>	<p>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7. 26.></p> <p>제 3 조(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법 제 6 조제 3 항에 따른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 월 31 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	--

<p>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7 조(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4. 11. 19., 2017. 7. 26.></p> <p>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 4 조(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 27 조제 2 항에 따른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6. 20.></p> <p>② 시·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 법 제 26 조제 1 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p>③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p>	
<p>제 3 장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p>		
<p>제 8 조(119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p> <p>① 소 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 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 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 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 5 조(119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p> <p>①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119 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4. 7. 7., 2014. 7. 14., 2014. 11. 19., 2016. 10. 25., 2017. 7. 26.></p> <p>1. 일반구조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 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 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p> <p>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p>	<p>제 3 조(119 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p> <p>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5 조에 따른 119 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 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p> <p>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 1 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p> <p>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p> <p>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p> <p>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p> <p>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p> <p>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p> <p>3. 직할구조대: 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	--	--

	<p>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 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④ 119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p>	
--	--	--

<p>제 9 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p> <p>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 1 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소방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④ 소방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p>	<p>제 7 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p> <p>① 소방청장은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소방청장은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제 5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p>	<p>제 6 조(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p> <p>① 법 제 9 조제 7 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p>② 제 1 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	---	---

<p>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⑤ 소방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⑥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 1 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8 조(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p> <p>① 소방청장은 법 제 9 조제 3 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 교육훈련: 붕괴 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 조정요원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응급 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 <p>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	---	--

<p>제 10 조(119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p> <p>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 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 10 조(119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p> <p>①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119 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25., 2017. 7. 26.></p> <p>1. 일반구급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 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p> <p>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삭제 <2012. 6. 20.></p> <p>④ 삭제 <2012. 6. 20.></p>	<p>제 7 조(119 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p> <p>① 영 제 10 조에 따른 119 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 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p> <p>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 10 조제 3 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 1 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 1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	---	---

**제 10 조의 2(119 구급상황
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 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 1 호 및 제 2 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제 13 조의 2(119 구급상황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 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1 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제 3 항에 따라 2 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 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 10 조의 2 제 2 항제 4 호에 따른 1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제 14 조(구급활동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7. 26.>

<p>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 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 22 조제 1 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7 조제 2 항제 4 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3. 21.]</p>	<p>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7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 조제 1 항 각 호의 정보</p> <p>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p> <p>③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⑤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p>	
---	--	--

	<p>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7.,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6. 20.]</p>	
<p>제 10 조의 3(119 구급차의 운용)</p> <p>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 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② 119 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 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p>		<p>제 7 조의 2(119 구급차의 배치·운용기준)</p> <p>① 법 제 10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119 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 4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그 밖에 119 구급차 차량제원,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p>

<p>제 11 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 8 조제 1 항 및 제 10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14 조(119 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11 조에 따라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하여 119 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119 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5.></p>	
<p>제 12 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p> <p>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제 1 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그 밖에 필요한</p>	<p>제 15 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p> <p>① 소방청장은 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를 제 5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p>	<p>제 9 조(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p> <p>① 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p> <p>② 법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 1 항을 준용하되, 항공구조구급대에 두</p>

<p>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 1 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p>	<p>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 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4 장 구조·구급활동 등</p>		
<p>제 13 조(구조·구급활동)</p> <p>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누구든지 제 1 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20 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p> <p>① 구조대원은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p>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구급대원은 법 제 13 조제 3 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차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 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	--

	<p>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p> <p>③ 구조·구급대원은 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p> <p>④ 구조·구급대원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 14 조(유관기관과의 협력)</p> <p>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p>		

<p>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 15 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p> <p>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22 조(손실보상)</p> <p>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5 조제1 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제1 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 조제1 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소방청장등은 제2 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 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④ 제3 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 조부터 제87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 16 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① 소방청장등은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등은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4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

**제 13 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① 소방청장등이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4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 1 항에 따른 인도·인계는 구조·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인계하기

<p>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p> <p>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p> <p>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p>		<p>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p>
<p>제 17 조(구조된 사람의보호)</p> <p>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 18 조(구조된 물건의 처리)</p> <p>①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23 조(구조된 물건의 처리)</p> <p>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4 조 또는 제 16 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구조·구</p>	

	<p>급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을 인계받은 경우 인계받은 날부터 14 일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청구권인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나타나 그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소유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조된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이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불편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조된 물건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건일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적</p>	
--	--	--

	<p>법하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p> <p>④ 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각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급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구조된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제 19 조(가족 및 유관 기관 연락)</p> <p>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p> <p>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p>		

<p>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구조·구급대원은 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 20 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p> <p>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4 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p>	<p>제 24 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p> <p>①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팩스·전화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p> <p>② 제 1 항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고,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역의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14 조(구급활동 지원)</p> <p>소방청장등은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7. 26.></p> <p>제 15 조(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p> <p>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p>

<p>② 제 1 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17. 7. 26.></p> <p>③ 제 1 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17. 7. 26.></p> <p>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p> <p>⑤ 소방청장등은 제 1 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p>		<p>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 3 호 서식의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제 1 항에 따른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	--	--

<p>제 21 조(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p> <p>① 구조·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조·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제 22 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p> <p>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구조·구급활동상황 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제 17 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p> <p>① 구조대원은 법 제 22조에 따라 별지 제 4 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처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조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p> <p>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p>

		<p>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18 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p> <p>① 구급대원은 법 제 22조에 따라 별지 제 5 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p> <p>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 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 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구급대원은 구급활동 중 심폐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한 경</p>
--	--	---

		<p>우에는 별지 제 6 호서식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에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0.></p> <p>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 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22 조의 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p> <p>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본조신설 2015. 12. 15.]</p>		

<p>제 23 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p> <p>①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25 조(안전사고방지대책)</p> <p>① 소방청장은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제 1 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유형별 안전관리 기본수칙과 행동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 23 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p> <p>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3 호부터 제 15 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p>	<p>제 25 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내용)</p> <p>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 2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③ 제 1 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제 2 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15.]</p>	<p>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 1 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감염병으로 진단된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사실을 추가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 2 호 및 제 3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2. 해당 감염병의 주요 증상 3.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 사항 <p>[본조신설 2016. 3. 11.] 제 26 조(감염관리대책)</p> <p>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 감염관리실을 1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p>	
---	--	--

	<p>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법 제 2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이 조 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3. 11., 2017. 7. 26.></p> <p>④ 제 1 항에 따른 119 감염관리실의 규격·성능 및 119 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목개정 2016. 3. 11.]</p>	
--	--	--

<p>제 24 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 266조부터 제 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p>제 5 장 보칙</p>		
<p>제 25 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p> <p>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24 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p> <p>① 법 제 25 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및 항공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p> <p>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p>

<p>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합하여 구조대의 실정에 맞도록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구조대원은 연 40 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사능 누출, 생화학 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p>④ 구조대원은 연 40 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	--	--

		<p>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 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p> <p>4.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p> <p>제 25 조(항공구조구급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p> <p>① 법 제 25 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항공구조구급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조종사</p> <p>가. 비행교육훈련</p> <p>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p> <p>2) 자격회복훈련</p> <p>3) 기술유지비행훈련</p> <p>나. 조종전문교육훈련</p> <p>1) 해상생환훈련</p> <p>2) 항공안전관리교육</p> <p>3) 계기비행훈련</p> <p>4) 비상절차훈련</p> <p>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p> <p>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p> <p>2. 정비사</p> <p>가. 해상생환훈련</p> <p>나. 항공안전관리교육</p> <p>다. 항공정비실무교육</p>
--	--	--

		<p>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1. 26.]</p> <p>제 26 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p> <p>① 법 제 25 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p> <p>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급대의 실정에 맞도록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 교육 3.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	--	--

		<p>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⑤ 그 밖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p>
<p>제 25 조의 2(구급지도사)</p> <p>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 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 27 조의 2(구급지도사의 선임 등)</p> <p>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p>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 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 급의료 지도</p> <p>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p> <p>5. 응급처치 방법·절차 의 개발</p> <p>6. 재난 등으로 인한 현 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p> <p>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구급 활동에 대한 지도·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 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 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p> <p>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 도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 다. <개정 2017. 7. 26.></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 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p>	
--	---	--

	<p>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⑤ 소방청장등은 제 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⑥ 소방청장등은 제 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p> <p>⑦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p> <p>[본조신설 2017. 1. 26.]</p>	
<p>제 26 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p> <p>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p>	<p>제 28 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p> <p>① 법 제 26 조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p>	

<p>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소방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③ 제 1 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구조·구급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구급서비스의 품질관리 2.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3.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4. 구조·구급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p>②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p> <p>③ 소방본부장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도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p>	
--	--	--

	<p>해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27 조(구조·구급정책 협의회)</p> <p>①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②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p> <p>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2 조(구조·구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p> <p>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 월 31 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④ 소방청장은 제 3 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p>	

	<p>(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7. 26.></p> <p>제 4 조(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 27 조제 2 항에 따른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6. 20.></p> <p>② 시·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	--	--

	<p>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p> <p>3. 법 제 26 조제 1 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p> <p>4.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p>	
<p>제 27 조의 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p> <p>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 32 조의 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법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 과 같다.</p> <p>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 월 31 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③ 제 2 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p>	

	<p>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p> <p>④ 소방청장등은 매년 3 월 31 일까지 전년도 응급 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 여 제 2 항에 따른 응급처 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⑤ 소방청장등은 응급처 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⑥ 제 5 항에 따라 갖추 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 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 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p> <p>[본조신설 2017. 1. 26.] [종전 제 32 조의 2 는 제 32 조의 4 로 이동 <2017. 1. 26.>]</p> <p>제 32 조의 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p> <p>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 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 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매년 10 월 31 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 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p>	
--	--	--

	<p>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 월 31 일까지 전년도 응급 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 1 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p> <p>[본조신설 2017. 1. 26.]</p>	
제 6 장 벌칙		
<p>제 28 조(벌칙)</p> <p>정당한 사유 없이 제 13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p>		
<p>제 29 조(벌칙)</p> <p>정당한 사유 없이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 29 조의 2(벌칙)</p> <p>제 23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15.]</p>		
<p>제 30 조(과태료)</p> <p>① 제 4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p>제 33 조(과태료의 부과 기준)</p> <p>법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 1. 26.></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법률 제 15522 호, 2018. 3. 20.,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8453 호, 2017. 11. 28.,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538 호, 2017. 12. 1.,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개정 2011.8.4〉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 2 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1. 별표 1 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 1 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 2 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6, 13., 2010. 3. 1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1. 별표 1 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 1 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p>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p> <p>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p> <p>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p> <p>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p> <p>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	--	--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 3 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제 4 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8. 4.]		

**제 5 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 3 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3.>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를 별지 제 1 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제 5 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 86 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 1 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p>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p>		
<p>제 3 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p>		
<p>제 6 조(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등)</p> <p>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p> <p>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 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 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4 조(응급환자의 이송 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p> <p>① 의료인은 법 제 11 조 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 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 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 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 여야 한다.</p> <p>② 의료인은 제 1 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 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2 에 따 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 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 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p> <p>③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 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p>

		<p>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 2 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p>[전문개정 2014. 5. 1.]</p> <p>제 5 조(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 11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p>
<p>제 7 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p> <p>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p> <p>②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2 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p> <p>①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p>	

	<p>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1.></p> <p>②의료인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p> <p>③의료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p>	
<p>제 8 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p> <p>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p>		<p>제 6 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 14 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p>

<p>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19., 2012. 11. 15.></p> <p>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 3 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0. 3. 19.></p> <p>③제 2 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p> <p>제 7 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을 운용하는 자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p>
---	--	--

		<p>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 분의 1 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 8. 19.></p>
<p>제 9 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p> <p>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p>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p>	<p>제 3 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p> <p>①법 제9 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를 별지 제 1 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p> <p>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얻</p>	

<p>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p> <p>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p> <p>제 8 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p> <p>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p> <p>③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p>
--	--	--

		<p>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 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 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p>[제목개정 2015. 8. 19.]</p>
<p>제 10 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p> <p>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9 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p> <p>①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학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절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p>2. 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p> <p>②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8. 3.></p> <p>[제목개정 2012. 8. 3.]</p>
<p>제 11 조(응급환자의 이송)</p> <p>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p> <p>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 4 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p> <p>① 의료인은 법 제 11 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의료인은 제 1 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 구조·구급에 관한</p>

<p>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법률」 제 10 조의 2에 따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p> <p>〈개정 2015. 8. 19.〉</p> <p>③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 2 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p>[전문개정 2014. 5. 1.]</p> <p>제 5 조(이송비용의 청구)</p> <p>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 11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p>
--	--	---

		<p>제 10 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p> <p>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 22 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 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2. 8. 3., 2012. 8. 31.></p> <p>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p> <p>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 부</p> <p>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9 조제 3 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20 조제 2 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 부</p> <p>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 부</p>
--	--	--

		<p>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p> <p>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p> <p>가. 별지 제 5 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 부</p> <p>나. 별지 제 16 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 부</p> <p>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p> <p>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제 1 항 제 1 호라목 및 제 1 항제 2 호다목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 8. 3.></p> <p>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p> <p>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p> <p>3.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을</p>
--	--	---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2. 8. 3.]
<p>제 12 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p> <p>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 80 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11. 8. 4.]</p>		<p>제 7 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p> <p>②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 분의 1 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 8. 19.></p> <p>제 11 조(이송처치료의 기준)</p> <p>①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p> <p>②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이송</p>

		<p>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5.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p>제 13 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26 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별표 5 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2. 18.></p> <p>②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 의 2 와 같다. <개정 2015. 12. 18.></p> <p>③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p>
--	--	--

		<p>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 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 계획서 1 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 부 <p>④시·도지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⑥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p>
--	--	--

		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 4 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 13 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 15 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①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8. 19.> ②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 월 20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8. 19.>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분기별·관할지역별로 운영실적·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제목개정 2015. 8. 19.]
제 13 조의 2(응급의료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3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 13 조의 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 3 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3 조의 2 제 5 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 5 조의 2(자료의 범위 등) ① 법 제 13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조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 47	

<p>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p> <p>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p> <p>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p> <p>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계획</p> <p>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p> <p>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대응 계획</p> <p>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p> <p>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p> <p>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p> <p>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사항</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p>	<p>조제 2 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p> <p>2. 「의료급여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p> <p>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p> <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p> <p>5.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p> <p>6. 「주민등록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p> <p>7.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p> <p>8. 「교통안전법」 제 51 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통계 또는 정보</p> <p>② 법 제 13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 13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p>	
--	---	--

<p>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 13 조의 5 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 제 5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p> <p>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p> <p>가.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p> <p>나. 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p> <p>다. 법 제 30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p> <p>라. 법 제 31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p> <p>3.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 2 항제 3 호, 제 7 호 및 제 8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p>	
---	---	--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 3 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 1 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7. 24.]</p>	
<p>제 13 조의 3(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p> <p>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p>	<p>제 5 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p> <p>① 법 제 13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p>	

<p>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 13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p> <p>② 법 제 13조의 3 제 2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8. 3.]</p>	
<p>제 13 조의 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p>	<p>제 5 조의 2(자료의 범위 등)</p> <p>① 법 제 13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 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p> <p>1.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조에 따른 가입자·피부</p>	

<p>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p> <p>② 제 1 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p> <p>③ 제 1 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p> <p>[본조신설 2011. 8. 4.]</p>	<p>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 47 조제 2 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p> <p>2. 「의료급여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p> <p>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 조제 2 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p> <p>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p> <p>5.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p> <p>6. 「주민등록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p> <p>7.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p> <p>8. 「교통안전법」 제 51 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통계 또는 정보</p> <p>② 법 제 13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 13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p>	
--	---	--

	<p>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 제 5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p> <p>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p> <p>가.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p> <p>나. 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p> <p>다. 법 제 30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p> <p>라. 법 제 31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p> <p>3.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 2 항제 3 호,</p>	
--	--	--

	<p>제 7 호 및 제 8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 3 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 1 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7. 24.]</p>	
--	---	--

<p>제 13 조의 5(중앙응급의료위원회)</p> <p>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4. 소방청장 5. 제 25 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p>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 6 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p> <p>① 법 제 13 조의 5 제 5 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③ 법 제 13 조의 5 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5. 10.〉</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p>	
--	--	--

<p>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 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명</p> <p>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명</p> <p>3.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 명</p> <p>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 명</p> <p>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를 대표하는 사람 1 명</p> <p>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 13 조의 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p> <p>2. 「국가재정법」 제 74 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p> <p>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p> <p>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p> <p>⑥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p> <p>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p> <p>⑧ 제 1 항부터 제 7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10.></p> <p>[전문개정 2012. 8. 3.]</p>	
---	--	--

<p>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p> <p>6. 응급의료의 중기·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p> <p>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p> <p>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8. 4.]</p>		
<p>제 13 조의 6(시·도응급의료위원회)</p> <p>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 13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p>	<p>제 7 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법 제 13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8. 3.></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p> <p>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p> <p>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p> <p>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③ 시·도위원회는 매년 2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8. 4.]</p>	<p>〈개정 2012. 8. 3., 2015. 7. 24.〉</p> <p>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p> <p>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p> <p>3.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p> <p>4.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 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p> <p>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p>	
---	---	--

	<p>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제목개정 2012. 8. 3.]</p>	
<p>제 14 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6. 1., 2015. 7. 24., 2016. 3. 29., 2016. 12. 2., 2017. 10.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제 1 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 15 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제 1 항에 따른 안전 	<p>제 7 조의 2(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p> <p>법 제 14 조제 1 항제 1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 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p> <p>[본조신설 2012. 8. 3.]</p>	<p>제 6 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 14 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19., 2012. 11. 15.></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14 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 3 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0. 3. 19.></p>

<p>· 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p> <p>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p> <p>8.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9. 「항공안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p>	<p>제 8 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p> <p>② 교육·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육·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p> <p>[본조신설 2008. 12. 31.]</p>	<p>③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p> <p>제 16 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②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
--	--	---

<p>·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 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13. 「국민체육진흥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체육지도자</p> <p>14. 「유아교육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교사</p> <p>15.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보육교사</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응급처치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3., 2010. 1. 18.,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p> <p>③ 시·도지사는 제 2 항에 따라 응급처치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p>		<p>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 부</p> <p>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	--	---

<p>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p> <p>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p> <p>[제목개정 2011. 8. 4.]</p>		
<p>제 15 조(응급의료정보 통신망의 구축)</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p>		<p>제 7 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을 운용하는 자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p> <p>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 분의 1 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 8. 19.></p>

<p>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15 조의 2(비상대응 매뉴얼)</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3. 18.]</p>	<p>제 8 조의 2(비상대응 매뉴얼의 내용)</p> <p>①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 	

	<p>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p> <p>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p> <p>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p> <p>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p> <p>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p> <p>②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p> <p>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p> <p>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p> <p>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p>	
--	---	--

	<p>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p> <p>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 리</p> <p>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p> <p>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4. 9. 18.]</p> <p>제 8 조의 3(비상대응매뉴얼 의 교육 등)</p> <p>① 법 제 15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 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방자치단체별·직종 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 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 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 고, 교육시간은 매년 12 시간 이상으로 한다.</p>	
--	--	--

	<p>③ 법 제 1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9. 18.]</p>	
<p>제 16 조(재정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47 조의 2 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17 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 시·도지사는 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 3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p> <p>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 만명당 1 개소</p>

		<p>2. 도 : 인구 50 만명당 1 개소</p> <p>②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 과 같다.</p> <p>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 부</p> <p>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 계획서 1 부</p> <p>④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17 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p>		<p>제 8 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p> <p>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p> <p>[전문개정 2011. 8. 4.]</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p> <p>③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	--	---

		<p>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목개정 2015. 8. 19.]</p> <p>제 18 조의 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31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 <p>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 년마다 같은 해에 시행하며,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p> <p>③ 제 1 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p>
--	--	--

		<p>사 및 결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p> <p>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 12 조, 제 13 조, 제 16 조, 제 17 조 및 제 18 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⑥ 법 제 31 조의 3 제 1 항제 3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17 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5. 8. 19.]</p>
--	--	---

제 18 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 1 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 9 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 일 활

	<p>동상향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p> <p>제 10 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p> <p>①법 제 18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절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p> <p>②제 1 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	--	--

제 5 장 재정 〈개정 2011.8.4〉		
<p>제 19 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11 조(기금의 회계기관)</p> <p>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장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p> <p>제 12 조(기금업무의 위탁)</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 21 조제 1 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 62 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10. 3. 15., 2012. 8. 3., 2012. 8. 31.></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 1 항의 규정에</p>	<p>제 18 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 법 제 3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 과 같다.</p> <p>②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 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 계획서 1 부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p>	
<p>제 20 조(기금의 조성)</p> <p>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p>② 정부는 제 1 항제 3 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p>		

<p>1. 「도로교통법」 제 160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 16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p> <p>2. 「도로교통법」 제 162 조제 3 항에 따른 범칙금 [제목개정 2011. 8. 4.] [법률 제 9305 호(2008. 12. 31.) 부칙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 2 항제 1 호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함]</p>		
<p>제 21 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5. 29.></p> <p>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 22 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p> <p>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p> <p>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p>	<p>제 12 조(기금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 21 조제 1 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 62 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10. 3. 15., 2012. 8. 3., 2012. 8. 31.></p>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p>	

<p>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p> <p>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p> <p>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p> <p>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전문개정 2011. 8. 4.]</p>	<p>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p> <p>제 17 조(재해시의의료지원)</p> <p>법 제 21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p>	
<p>제 22 조(미수금의 대지급)</p> <p>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22 조의 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 18 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p> <p>법 제 22 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 8. 3.></p> <p>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p> <p>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p> <p>[제목개정 2012. 8. 3.]</p>	<p>제 9 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p> <p>① 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8. 3.></p> <p>1. 의학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p> <p>2. 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p> <p>② 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p>

<p>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2 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p> <p>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 2 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p> <p>⑤ 제 4 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p>	<p>제 19 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 22 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 24 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 8. 3.] <p>제 20 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p> <p>②제 1 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p>	<p>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p> <p>제 10 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 22 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 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2. 8. 3., 2012. 8.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 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9 조제 3 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20 조제 2 항에 따
--	--	---

<p>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p> <p>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p> <p>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p>	<p>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p> <p>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p> <p>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p> <p>제 21 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p>	<p>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p> <p>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p> <p>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p> <p>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p> <p>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p> <p>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p> <p>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제1항제1호라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 8. 3.></p> <p>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p>
--	--	--

	<p>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 제 22 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 22 조제 4 항에 따라 상환의 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p> <p>제 23 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법 제 22 조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p>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 22 조제 5 항에 따라 상환</p>	<p>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p> <p>3.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2. 8. 3.]</p> <p>제 16 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도면 1부
--	--	---

	<p>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p> <p>제 27 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p> <p>① 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 22 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에 관한 사무</p> <p>2. 법 제 22 조의 2 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p> <p>② 보건복지부장관(제 23 조의 2 및 제 26 조에</p>	<p>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 부</p> <p>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 부</p> <p>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제 22 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p> <p>법 제 31 조의 3 또는 제 35 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p>
--	---	--

	<p>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13 조의 4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 36 조 및 제 37 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 38 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4. 법 제 2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p>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p> <p>[제목개정 2015. 8. 19.]</p>
--	---	--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18 조에 따른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 51 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 53 조에 따른 이송업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 55 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 56 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 57 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p>	
--	--	--

제 22 조의 2(자료의 제공)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1. 28., 2018. 3. 20.>

② 제 1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8. 4.>

③ 제 1 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 1. 28.>

[본조신설 2002. 3. 25.]

<p>제 22 조의 3(구상권의 시효)</p> <p>① 제 22 조제 4 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p> <p>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1. 8. 4.]</p>		
<p>제 23 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p> <p>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報酬)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 17 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23 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p> <p>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 3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②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9 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 부</p>

		<p>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 부</p> <p>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 계획서 1 부</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응급의료 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24 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 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p> <p>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 1 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11 조(이송처치료의 기준)</p> <p>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p> <p>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5.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제 6 장 응급의료기관 등 <개정 2011.8.4>		
<p>제 25 조(중앙응급의료센터)</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 3 조의 3 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 26 조에 따른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p>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p>		<p>제 7 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p> <p>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 분의 1 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 8. 19.></p> <p>제 12 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 와 같다.</p> <p>②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p>

<p>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 계획서 1부 <p>③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④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제 26 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 3 조의 4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 3 조</p>		<p>제 13 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26 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별</p>

<p>의 3에 따른 300 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p> <p>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p> <p>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p> <p>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p> <p>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 11 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p> <p>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p> <p>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전문개정 2011. 8. 4.]</p>		<p>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2. 18.></p> <p>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 2와 같다. <개정 2015. 12. 18.></p> <p>③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 부</p> <p>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 계획서 1 부</p> <p>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 부</p> <p>④ 시·도지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p>
--	--	--

		<p>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⑥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제 13 조의 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p> <p>법 제 2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p>
--	--	---

		<p>2.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물품의 관리</p> <p>3.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p> <p>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p> <p>5. 그 밖에 법 제 15 조의 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p> <p>[본조신설 2017. 12. 1.]</p>
<p>제 27 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p> <p>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 <2015. 1. 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p>제 23 조의 2(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p> <p>① 법 제 27 조제 3 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27 조제 3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p>	<p>제 4 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p> <p>① 의료인은 법 제 11 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의료인은 제 1 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2에 따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p>

<p>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p> <p>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p> <p>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p> <p>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3 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목개정 2015. 1. 28.]</p>	<p>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7. 24.]</p>	<p>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p> <p><개정 2015. 8. 19.></p> <p>③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 2 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p>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p> <p>[전문개정 2014. 5. 1.]</p> <p>제 14 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 27 조제 2 항제 9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8.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의 수립·운영 2.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	---	--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 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5. 8. 19.]
제 28 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제 24 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①법 제 2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규모·시설·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등의 편성·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자, 당직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4. 법 제 11 조에 따라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결정하기 전에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환	

<p>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목개정 2015. 1. 28.]</p>	<p>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p> <p>5.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의료장비, 응급수술 가능질환, 응급환자의 수용 및 이송 현황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p> <p>②법 제 28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응급환자의 수용 및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p> <p>③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p>	
--	--	--

	<p>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p> <p>④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p> <p>[제목개정 2015. 7. 24.]</p>	
<p>제 29 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p> <p>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16 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 과 같다.</p> <p>②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 부</p> <p>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 부</p> <p>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 부</p> <p>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제 30 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p> <p>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p>		<p>제 17 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 시·도지사는 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p>

<p>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 11 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p>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p> <p>[전문개정 2011. 8. 4.]</p>		<p>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 3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 만명당 1 개소 2. 도 : 인구 50 만명당 1 개소 <p>②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 과 같다.</p> <p>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 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 계획서 1 부
--	--	---

		④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0 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1. 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医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제 17 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30 조의 2 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1 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 의 2 와 같다.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 6 호의 2 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

<p>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p>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 부 2. 권역외상센터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 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 부 4. 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 부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의 2 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1. 15.]</p>
<p>제 30 조의 3(지역외상센터의 지정)</p> <p>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p> <p>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14.]</p>		

<p>제 30 조의 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2. 5. 14.]</p>		
<p>제 31 조(지역응급의료 기관의 지정)</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 11 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p>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p>		<p>제 18 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p> <p>①법 제 3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 6 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 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 계획서 1 부

<p>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 한 경우에는 별지 제 7 호 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31 조의 2(응급의료기관 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 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31 조의 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31 조의 2 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 17 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p>제 18 조의 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31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p>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1. 28.]</p>	<p>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p> <p>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같은 해에 시행하며,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p> <p>③ 제 1 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p> <p>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 12 조, 제 13 조, 제 16 조, 제 17 조 및 제 18 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

		<p>⑥ 법 제 31 조의 3 제 1 항제 3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17 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8. 19.]</p> <p>제 22 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 31 조의 3 또는 제 35 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제목개정 2015. 8. 19.]</p>
<p>제 31 조의 5(응급실 출입 제한)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 18 조의 4(응급실 출입 제한) ① 법 제 31 조의 5 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 명으로 한다.</p>

<p>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p> <p>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p>		<p>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p> <p>1. 소아·장애인·주취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p> <p>2.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p> <p>3.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p> <p>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실에 출</p>
--	--	---

		<p>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관리하고, 1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2. 1.]</p>
<p>제 32 조(비상진료체계)</p> <p>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 31 조</p>		<p>제 19 조(비상진료체계)</p> <p>① 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2. 28., 2015. 12. 18.></p> <p>1.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p>

<p>의 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p> <p>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 31 조의 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p> <p>1. 당직전문의등</p> <p>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p> <p>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p> <p>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p> <p>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p> <p>② 법 제 32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 1 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개정 2013. 2. 28.></p> <p>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당직전문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8. 3.]</p>
--	--	--

<p>제 33 조(예비병상의 확보)</p> <p>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20 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p> <p>①응급의료기관이 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 33 조제 4 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 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 병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p> <p>②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이하 "전담의사"라 한다)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 능성 등을 감안하여 매일 오후 10 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 33 조의 2(응급실 체류 제한)</p> <p>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p>		<p>제 20 조의 2(응급실 체류 제한)</p> <p>법 제 33 조의 2 제 2 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p>

<p>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 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p>		<p>하는 기준"이란 연 100 분의 5 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7. 12. 1.]</p>
<p>제 34 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21 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p> <p>①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p> <p>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1.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p> <p>재해 또는 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p>

		<p>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p> <p>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p> <p>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p> <p>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p> <p>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p> <p>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p> <p>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p>
--	--	--

		<p>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개시일 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제 35 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p> <p>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 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p>		

<p>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p> <p>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p> <p>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p>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 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 16 조제 1 항, 제 17 조제 4 항 및 제 30 조의 4 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p>		
---	--	--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 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 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6. 12. 2.]</p>		
<p>제 35 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23 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 35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9 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 부</p>

		<p>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 부</p> <p>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 계획서 1 부</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응급의료 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제 7 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 36 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 급 응급구조사와 2 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 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 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제 25 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법 제 36 조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6. 11.>	제 24 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법제 36 조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 과 같다. 제 26 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법 제 36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별표 12 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 퍼

<p>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③ 2 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p> <p>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p> <p>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p> <p>⑤ 1 급 응급구조사 및 2 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자의 학력·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p> <p>제 26 조(응급구조사시험관리업무의 위탁)</p> <p>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 조제 4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p> <p>[전문개정 2015. 12. 22.]</p>	<p>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p> <p>③ 응급구조사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 조에 따라 시험관리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4. 5. 1.></p>
--	---	--

**제 36 조의 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36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 41 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 29 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 3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6. 12. 30., 2017. 5. 30.>

1. 법 제 36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 제 36 조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3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 부

나. 법 제 36 조제 2 항 제 2 호 또는 제 3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 부

다. 법 제 36 조제 2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 부 및 경력증명서 1 부

2. 법 제 37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 부

		<p>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p>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 11 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 12 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 8.></p> <p>제 30 조(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 36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 8., 2016. 12. 30., 2017. 5. 30.></p>
--	--	--

		<p>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p> <p>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p> <p>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p>
<p>제 36 조의 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p> <p>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43 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 26 조의 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p> <p>① 응급구조사는 법 제 36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응급구조사는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 43 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p>	

	<p>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3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5. 29.] [종전 제 26 조의 2는 제 26 조의 4 로 이동 <2017. 5. 29.>]</p> <p>제 26 조의 3(업무의 위탁)</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36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 	
--	---	--

	<p>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p> <p>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36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36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 36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p>	
--	---	--

	<p>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7. 5. 29.]</p>	
<p>제 37 조(결격사유)</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07. 12. 14., 2011. 8. 4., 2015. 1. 28.></p> <p>1. 「정신보건법」 제 3 조 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p> <p>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p>		

<p>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p> <p>가. 이 법</p> <p>나. 「형법」 제 233 조, 제 234 조, 제 268 조(의료 과실만 해당한다), 제 269 조, 제 270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제 317 조제 1 항</p> <p>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 한 특별조치법」, 「지역보 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 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 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제목개정 2011. 8. 4.]</p>		
<p>제 38 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p> <p>①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 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 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 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 다.</p> <p>② 제 1 항에 따라 수험 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p>		

<p>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급 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39 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 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 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 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32 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 한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은 별표 13 과 같다.</p>
<p>제 40 조(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41 조(응급구조사의 업 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 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 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 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 며, 「의료법」 제 27 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 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p>		<p>제 33 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 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는 별표 14 와 같다.</p>

<p>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41 조의 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응급구조사는 제 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 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5. 14.]</p>		<p>제 33 조의 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p> <p>① 법 제 41 조의 2 제 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39 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 2. 법 제 41 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법 제 42 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의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3. 법 제 48 조의 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4. 법 제 49 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제출 방법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상태 분류 및 응급처치 요

		<p>령 등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업무지침을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그 업무지침을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8. 4.></p> <p>[본조신설 2012. 11. 15.]</p>
<p>제 42 조(업무의 제한)</p> <p>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 41 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34 조(경미한 응급처치)</p> <p>법 제 42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2 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p>

<p>제 43 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 1 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제 3 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5. 14.]</p>	<p>제 26 조의 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p> <p>① 응급구조사는 법 제 36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응급구조사는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 43 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3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제 35 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p> <p>①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p> <p>1.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직업윤리</p> <p>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p> <p>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p> <p>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p> <p>2. 보수교육의 대상: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p> <p>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p> <p>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 시간 이상. 다만, 1 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p>
---	---	--

	<p>[본조신설 2017. 5. 29.] [종전 제 26 조의 2 는 제 26 조의 4 로 이동 〈2017. 5. 29.〉]</p>	<p>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1 년 이상 2 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 시간 이상</p> <p>나. 2 년 이상 3 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 시간 이상</p> <p>다. 3 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 시간 이상</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7.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p>③ 법 제 43 조제 2 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p>
--	---	---

		<p>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2. 1.></p> <p>④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14 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 43 조제 2 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p>⑤ 법 제 43 조제 2 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 4 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p>
--	--	---

		<p>제 14 호의 2 서식의 응급 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p> <p>⑥ 법 제 43 조제 2 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2017. 12. 1.></p> <p>⑦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 15 호 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p>⑧ 법 제 43 조제 2 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 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15., 2017. 12. 1.></p> <p>⑨ 제 8 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p>
--	--	--

		<p>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15., 2017. 12. 1.></p> <p>⑩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2. 11. 15., 2017. 12. 1.></p> <p>⑪ 법 제 43 조제 3 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1. 15., 2017.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p>제 43 조의 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p> <p>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9 조부터</p>		<p>제 35 조의 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p> <p>법 제 43 조의 2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15.]</p>

제 41 조까지 및 제 41 조의 2 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14.]		
제 8 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p>제 44 조(구급차등의 운용자)</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 3 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p>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 1 항제 5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 2 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p>		<p>제 36 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p> <p>법 제 4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5 와 같다.</p> <p>제 42 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p> <p>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법 제 4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 52 조제 1 항에 따라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 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

<p>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p> <p>2.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p> <p>3.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p>
<p>제 44 조의 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p> <p>① 제 44 조제 1 항제 1 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p> <p>② 제 44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p>		<p>제 36 조의 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p> <p>① 법 제 44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 51 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의 5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p>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7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별지 제 18</p>

<p>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13. 6. 4.]</p>		<p>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p> <p>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p>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 서식의 부착용 통보필증 발급</p> <p>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이하 "</p>
---	--	--

		<p>신고필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 15 호의 8 서식의 부착용 신고필증 발급</p> <p>③ 법 제 44 조의 2 제 1 항 후단 및 제 2 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삭제 <2017. 12. 1.> <p>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의 9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 전의 시장·군수·구청</p>
--	--	---

		<p>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1.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p> <p>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p> <p>⑤ 제4항에 따라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p> <p>⑦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 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

		<p>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p> <p>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15 호의 11 서식의 구급차등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 월 31 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 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5. 1.]</p>
<p>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p> <p>① 제 44 조제 1 항제 1 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1. 「자동차관리법」 제 13 조, 「항공안전법」 제 15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p>		<p>제 36 조의 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p> <p>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 44 조의 3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의 11 서식의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통보(신고)필증, 부착용 통보(신고)필증</p> <p>2. 「자동차등록규칙」 제 4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p>

<p>2. 제 46 조의 2 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p> <p>② 제 44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구 급차등 운운자는 구급차등 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 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 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 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p>		<p>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 23 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 등록규칙」 제 2 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 하는 서류 1 부</p> <p>② 시장·군수·구청장 은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15 호의 12 서식 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 월 31 일까지 시·도지사 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그 관리대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p>
<p>제 45 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p> <p>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 의료종사자의 운송 		<p>제 37 조(구급차등의 용도)</p> <p>법 제 45 조제 1 항제 5 호 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4. 5.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 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p>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p> <p>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p>		<p>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p> <p>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p>
--	--	---

<p>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11. 8. 4.]</p>		
<p>제 46 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6. 12. 2.> [전문개정 2011. 8. 4.]</p>		<p>제 36 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 44 조의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 51 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의 5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7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별지 제 18 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p>

		<p>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p> <p>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선박법」 제 8 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 12 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이 법 제 46 조, 제 46 조의 2, 제 46 조의 3 및 제 47 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p>1. 통보의 경우: 별지 제 15 호의 6 서식의 부착용 통보필증 발급</p> <p>2. 신고의 경우: 별지 제 15 호의 7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및 별</p>
--	--	--

		<p>지 제 15 호의 8 서식의 부 착용 신고필증 발급</p> <p>③ 법 제 44 조의 2 제 1 항 후단 및 제 2 항 후단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 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 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삭제 <2017. 12. 1.> <p>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 의 9 서식의 구급차등 운 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변경 된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 여야 하고, 변경 통보 또 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변 경 전의 시장·군수·구청</p>
--	--	--

		<p>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1. 신고필증 1 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p> <p>2. 「자동차관리법」 제 7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 8 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 9 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 부</p> <p>⑤ 제 4 항에 따라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발급한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p> <p>⑦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5 호의 10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

		<p>1. 혈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p> <p>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15 호의 11 서식의 구급차등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5. 1.]</p> <p>제 38 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①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p> <p>② 법 제 46 조의 3 제 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 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p>
--	--	---

		<p>기준은 별표 15 의 2 와 같다. <신설 2017. 12. 1.></p> <p>③법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 과 같다. <개정 2017. 12. 1.></p> <p>④ 법 제 47 조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 의 2 와 같다. <신설 2015. 8. 19., 2017. 12. 1.></p> <p>⑤법 제 47 조제 3 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 과 같다. <개정 2015. 8. 19., 2017. 12. 1.></p> <p>[제목개정 2015. 8. 19.]</p>
<p>제 46 조의 2(구급차 운행연한)</p> <p>①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p>		

<p>· 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12. 2.]</p>		
<p>제 46 조의 3(응급의료 전용헬기)</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p>		<p>제 38 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p> <p>①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p>

<p>②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p>		<p>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p> <p>② 법 제 4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 의 2 와 같다. <신설 2017. 12. 1.></p> <p>③ 법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 과 같다. <개정 2017. 12. 1.></p> <p>④ 법 제 47 조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 의 2 와 같다. <신설 2015. 8. 19., 2017. 12. 1.></p> <p>⑤ 법 제 47 조제 3 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 과 같다. <개정 2015. 8. 19., 2017. 12. 1.></p> <p>[제목개정 2015. 8. 19.]</p>
---	--	--

<p>제 47 조(구급차등의 장비)</p> <p>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p> <p>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8.></p> <p>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차량 속도,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p>		<p>제 38 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p> <p>①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p> <p>② 법 제 4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 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 의 2 와 같다. <신설 2017. 12. 1.></p> <p>③법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 과 같다. <개정 2017. 12. 1.></p> <p>④ 법 제 47 조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p>
---	--	---

<p>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p> <p>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에 한정한다)</p> <p>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p> <p>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 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p> <p>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장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 이용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15. 1. 28.〉</p> <p>[전문개정 2011. 8. 4.]</p>		<p>16의2와 같다. 〈신설 2015. 8. 19., 2017. 12. 1.〉</p> <p>⑤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 8. 19., 2017. 12. 1.〉</p> <p>[제목개정 2015. 8. 19.]</p>
--	--	--

<p>제 47 조의 2(심폐소생술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p> <p>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p> <p>2.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p> <p>3. 「항공안전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항</p> <p>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 조제 4 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p> <p>5. 「선박법」 제 1 조의 2 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 톤 이상인 선박</p>	<p>제 26 조의 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p> <p>① 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 세대를 말한다.</p> <p>② 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4.></p> <p>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2 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 만명 이상인 대합실</p> <p>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 천명 이상인 대합실</p> <p>3. 「항만법」 제 2 조제 5 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p>	<p>제 38 조의 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p> <p>① 법 제 47 조의 2 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 15 호의 13 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5 호의 14 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 15 호의 15 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 월 31 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

<p>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공동주택</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p> <p>② 제 1 항에 따라 자동 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p> <p>③ 제 1 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p> <p>④ 제 1 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중 연면적이 2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 천명 이상인 대합실</p> <p>4. 「관광진흥법」 제 5 조 제 1 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 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p> <p>5. 「한국마사회법」 제 4 조에 따른 경마장</p> <p>6. 「경륜·경정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경주장</p> <p>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p> <p>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 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p> <p>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p> <p>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p>	<p><개정 2010. 3. 19., 2017. 12. 1.></p> <p>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 47 조의 2 제 2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 15 호의 16 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 [본조신설 2008. 6. 13.]</p> <p>제 38 조의 3(응급장비의 관리)</p> <p>① 법 제 47 조의 2 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월 1 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p>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p>
--	--	---

<p>〈개정 2012. 5. 14., 2016. 12. 2.〉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5. 14.]</p>	<p>[전문개정 2012. 8. 3.] [제 26 조의 2 에서 이동 〈2017. 5. 29.〉]</p>	<p>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9.〉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08. 6. 13.]</p>
<p>제 48 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39 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 인 이상이 포함된 2 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48 조의 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 48 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 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p> <p>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p> <p>[본조신설 2011. 8. 4.]</p>		<p>제 39 조의 2(수용능력의 확인 등)</p> <p>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 현황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도착 예정 시간 <p>②제 1 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8. 3.]</p>
<p>제 49 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p> <p>① 응급구조사가 출동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p>		<p>제 40 조(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p> <p>①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 등"이라 한다)는 법 제 4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p>

<p>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p> <p>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p> <p>③ 제 1 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p> <p>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 및 제 2 항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대장을, 응급환자의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 1</p>		<p>용을 별지 제 16 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응급구조사등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 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 부는 보관하고, 1 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 부는 이송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p> <p>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 49 조제 2 항에 따라 출동 및 처치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 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15., 2015. 8. 19.></p> <p>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 16 호의 2 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p>
---	--	---

<p>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p> <p>⑤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목개정 2016. 12. 2.]</p>		<p>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p>
<p>제 50 조(지도·감독)</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 47 조의 2제 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p>		

<p>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p>		
<p>제 51 조(이송업의 허가 등)</p> <p>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시·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이송업자가 제 3 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27 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p> <p>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 51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p>②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 51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p>제 36 조의 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p> <p>① 법 제 44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 51 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의 5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7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별지 제 18 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p>⑤ 이송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p> <p>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선박법」 제 8 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 12 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이 법 제 46 조, 제 46 조의 2, 제 46 조의 3 및 제 47 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p> <p>1. 통보의 경우: 별지 제 15 호의 6 서식의 부착용 통보필증 발급</p> <p>2. 신고의 경우: 별지 제 15 호의 7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및 별</p>
---	--	--

		<p>지 제 15 호의 8 서식의 부착용 신고필증 발급</p> <p>③ 법 제 44 조의 2 제 1 항 후단 및 제 2 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삭제 <2017. 12. 1.> <p>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 15 호의 9 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 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	--	---

		<p>1. 신고필증 1 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p> <p>2. 「자동차관리법」 제 7 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 8 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 9 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 부</p> <p>⑤ 제 4 항에 따라 변경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발급한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의 변경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p> <p>⑦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5 호의 10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p>
--	--	--

		<p>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p> <p>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15 호의 11 서식의 구급차등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5. 1.]</p> <p>제 41 조(이송업의 허가절차)</p> <p>①법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7 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06. 7.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 부
--	--	---

		<p>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부</p> <p>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 부</p> <p>5. 삭제 <2006. 7. 3.></p> <p>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가. 정관</p> <p>나. 임원의 명부 1 부</p> <p>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부</p> <p>7.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 부</p> <p>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 부</p> <p>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 부</p> <p>②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p>
--	--	---

		<p>3., 2008. 6. 13., 2010. 9.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대장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p>③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 영업지역(시·군·구 단위) 3. 구급차의 총대수·종별·형식·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삭제 〈2015. 1. 8.〉 5.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p>④시·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18 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 18 호의 2 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 19 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3., 2014. 5. 1.〉</p> <p>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 51</p>
--	--	---

		<p>조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0 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 4 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8., 2006. 7. 3., 2012. 6. 29., 2014. 5.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증 1 부 2. 변경내역서 1 부 <p>⑥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p> <p>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p>
--	--	--

		<p>별지 제 21 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14. 5.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p>제 52 조(지도의사)</p> <p>① 구급차등의 운전자(제 4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p> <p>② 구급차등의 운전자에 따른 지도의사의 수(數)와 업무 및 선임(選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42 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p> <p>① 구급차등의 운전자(법 제 4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 52 조제 1 항에 따라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 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p> <p>〈개정 2012. 8. 3.〉</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p>제 53 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제 43 조(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별지 제 22 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p>
<p>제 54 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p>		<p>제 44 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 54 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 23 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06. 7. 3., 2008. 6. 13., 2010. 9. 1.></p>

<p>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p> <p>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p> <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p>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p> <p>③ 제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p>		<p>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p> <p>2.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 부</p> <p>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 부</p> <p>4. 법 제 5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부</p> <p>②제 1 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6. 13., 2010. 9. 1.></p> <p>1. 삭제 <2008. 6. 13.></p> <p>2.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 :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p>
---	--	---

<p>제 54 조의 2(유인·알선 등 금지)</p> <p>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9 장 보칙</p> <p>〈개정 2011.8.4〉</p>		
<p>제 55 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6 조제 2 항, 제 8 조, 제 18 조제 2 항, 제 39 조, 제 40 조 또는 제 49 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 2.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 2 		<p>제 45 조(행정처분의 기준)</p> <p>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 과 같다.</p> <p>제 46 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p> <p>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 24 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p>

<p>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p> <p>3. 제 32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p> <p>3 의 2. 제 36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 41 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p> <p>4. 제 37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5. 제 42 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p> <p>6.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 36 조의 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12. 2.></p>		
--	--	--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 4 항에서 같다)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 2017. 10. 24.></p> <p>1. 제 18 조제 2 항, 제 28 조제 3 항, 제 32 조제 1 항, 제 33 조제 1 항, 제 35 조의 2, 제 44 조제 3 항, 제 44 조의 2 제 2 항, 제 45 조제 1 항, 제 46 조의 2, 제 47 조제 1 항·제 2 항, 제 48 조, 제 49 조제 3 항·제 4 항, 제 51 조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 제 52 조제 1 항, 제 53 조, 제 54 조제 3 항, 제 54 조의 2 또는 제 59 조를 위반한 경우</p>		
--	--	--

<p>2.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p> <p>3.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p> <p>4. 제 34 조에 따라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5.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④ 제 3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p> <p>⑤ 제 1 항과 제 3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8. 4.]</p>		
---	--	--

<p>[시행일:2012. 8. 5.] 제 55 조제 1 항, 제 55 조제 2 항(제 49 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p>		
<p>제 56 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12. 2.> 1. 제35 조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제 55 조제 1 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제 55 조제 3 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전문개정 2011. 8. 4.]</p>		
<p>제 57 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 55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p>	<p>제 28 조(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 5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p>	

<p>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p> <p>② 제 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p> <p>[전문개정 2011. 8. 4.]</p>	<p>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p>	
<p>제 58 조(권한의 위임)</p> <p>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59 조(유사명칭 사용 금지)</p> <p>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p> <p>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 35 조의 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10 장 벌칙</p> <p><개정 2011.8.4></p>		
<p>제 60 조(벌칙)</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p>		

<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p> <p>1. 제 12 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 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 상 또는 점거한 사람</p> <p>2. 제 36 조에 따른 응급 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 하여 제 41 조에 따른 응 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 람</p> <p>3. 제 51 조제 1 항을 위 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15. 1. 28., 2016. 5. 29.〉</p> <p>1. 제 6 조제 2 항을 위반 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 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p> <p>1 의 2. 제 36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 용하여 제 41 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p>		
---	--	--

<p>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p> <p>2. 제 40 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3. 제 42 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개정 2015. 1. 28., 2016. 12. 2.〉</p> <p>1. 제 18 조제 2 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p> <p>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p> <p>3. 제 45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61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p>		

<p>제 60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8. 4.]</p>		
<p>제 62 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14., 2013. 6. 4., 2016. 5. 29., 2016. 12. 2.></p> <p>1. 제 31 조의 2 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p> <p>1 의 2. 제 31 조의 5 제 2 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p>	<p>제 29 조(과태료의 부과)</p> <p>법 제 62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p> <p>[전문개정 2008. 6. 11.]</p>	

<p>2. 제 32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p> <p>3. 제 33 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p> <p>3 의 2. 제 47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p> <p>3 의 3. 제 48 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p> <p>3 의 4. 제 47 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 39 조 또는 제 49 조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	--	--

<p>4 의 2. 제 4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p> <p>4 의 3. 제 44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의 4. 제 46 조의 2 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 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p> <p>5. 제 51 조제 3 항, 제 53 조 또는 제 54 조제 3 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 59 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p> <p>②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 8. 4.]</p>		
---	--	--

**제 63 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 268 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5 조의 2 제 1 호나 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8. 4.]

